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리스크 관리

김 재 성*

-
- I. 서 론
 - II. 개성공단 연혁과 현황
 - III. 개성공단의 위험 관리
 - IV. 요약 및 결론
-

주제어 : 개성공단, 무역보험, 개성보험공단기업 리스크관리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I. 서 론

북한은 러시아 연방의 해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붕괴 이후 심각해진 체제위협, 경제난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과의 관계

*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조교수

개선을 핵심으로 판단하고 이를 생존의 ‘중심고리’ 전략으로 채택한 대남, 대미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¹⁾

김정일 시대로부터 현재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남북 경제협력과 외교적 정책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므로 북한의 협상전략 및 형태에 관한 일반적 특징에 관하여는 비교적 잘 알려진 상황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한 편으로는 대화와 경제협력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압박과 회유의 이중전략을 채택하여 표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결실과 내부적으로는 핵실험을 통한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경제협력의 결실로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001마리 소를 북으로 보내고 그 결실로 개성공단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개성공단은 2000.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시발점으로 2000. 8. 9. 남측의 현대 아산과 북측의 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에 단초가 되었다.

2002.11.27.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되었고, 개성공단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 이후 2007년 6월에 1단계 2차 분양업체를 선정하고, 2007.10월에는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완료되었다. 2010.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진행성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북측의 일방적인 발표로 진행된 개성공단의 진출입 폐쇄로 입주기업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남북한의 경색된 정치적 상황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한반도 리스크의 우려가 증가하여 긴장 속에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개성공단은 최초의 남북 협력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개성공단 개발로 휴전선이 약 15킬로미터 북상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히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할 위험이 특히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리스크 보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설치와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행 연구를

1) 고유환, “벼랑 끝 협상전술과 북한의 저의”, 월간북한, 제294호, 1996, p. 40.

살펴보면 허정필,²⁾ 이성춘,³⁾ 양문수,⁴⁾ 이해정,⁵⁾ 이상훈⁶⁾ 등의 자료가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2013년 도발적으로 전개된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고 개성공단 진출업체가 부담해야하는 리스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커버하기 위한 무역보험상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개성공단의 주요 현황과 중단 사태

1. 개성공단의 연혁

개성공단은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 1998.12, 1999.2월 두 차례 방북하여 북한에 서해안공단개발계획(약 800만평)을 제시하고 북한이 동의하여 시작되었다. 그 후 개성지역에 현대아산(주)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사이에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시작되었다.⁷⁾

개성공단 조성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2.11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됐다.

‘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공단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기존 북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단의 개발 및 운영이 사실상 우리 측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투자재산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국유

2) 허정필, “개성공단 폐쇄 사태의 행위자-네트워크 : 국소적 연결망과 포괄적 연결망 추적”,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북한연구학회, 2013.

3) 이성춘, “북한협상 모델 분석을 통한 경제협력 실천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5권 제3호, 2013.

4) 양문수, “개성공단 사태 이후 남북관계 : 평가와 과제”, 통일전략포럼보고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52권, 2013.

5) 이해정, “개성공단 국제화의 효과와 과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통권 제105호, 2013.

6) 이상훈,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경협합의서의 법적성격에 대한 고찰”, 법제처, 2003.

7) 통일부, “개성공단 길라잡이”, 2011. p. 11.

화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 등을 규정하는 등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해서 진전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성공단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아산(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과 북한에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되었다. 현대아산(주)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단개발을 담당하고 정부는 사업전반에 대한 정책, 제도, 외교, 통상지원을 담당하였다.⁸⁾⁹⁾

2004년 개성공단 입주가 처음 시작되었고, 2005년에는 18개사로 시작하여 2013년에 이르러 총 296개사(입주기업 123개, 미착공기업 74개, 공사중단기업 13개, 영업소 86개)에 이르게 되었다.¹⁰⁾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로서 상호 비교우위요소의 현실적 결합(남한의 자본·기술+북한의 노동력·토지)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개성공단의 시작은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남북한의 정치적 목적은 그 계산이 각각 다를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실적 결과로는 수만 명의 북근로자들이 새로운 경제활동을 체험(변화·발전의 현장학습)하고 간접적으로 남한의 기술과 문화(초코파이 등의 인센티브)를 체험하는 대단히 유익한 기회가 되고 있다.

2. 개성공단의 현황

개성공단은 <표 1> 입주 기업수와 같이 2005년 최초 18개 기업이 입주를 시작하여 첫 해 생산액 1,798만 불을 달성한 것을 시작으로 입주 2년 만에 65개의 입주기업에서 생산규모는 10배 이상 성장하였다. 2010년에는 32,332만 불을 달성하였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직전년도인 2012년에는 40,185만 불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8) 허정필, 전개논문, p. 226.

9) “개성공업지구는 평양에서 170km, 서울에서 70km 떨어진 개성직할시 일대 2000만평에 공업단지 800만평과 배후도시 1200만평을 건설하는 사업” ... “개성공단 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 (경향신문, 2000. 6.30. p. 5)

10) 통일부, 통일백서, 2014, p. 71.

〈표 1〉 입주 기업 수

(단위: 개, 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입주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125	-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8	14,854	230,685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

개성공단에 최초 투입된 북측 근로자는 2005년 6,013명으로 2006년에는 11,160명, 2007년에는 22,53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에까지 햇볕정책이 계승되어 남북한 사이에 큰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 급격히 증가하는 북측 근로자에 입하여 남측 근로자의 인원수는 최초 투입 507명에 비하여 2012년 157% 증가한 것으로 그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자 인원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적은 수의 관리/기술직 파견인원으로도 노사갈등 없이 정상 조업이 가능한 것은 개성공단의 특수성으로 판단된다.

다만 〈표 3〉 북한 근로자 투입수와 제품생산량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 개성공단이 경색되기 시작 한 이후 북측근로자의 투입 인원은 2012년 53,448명에서 2013년 52,329명으로 완만히 감소한 데 반하여 생산액은 2012년 전년 대비 47.6%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결국 이 결과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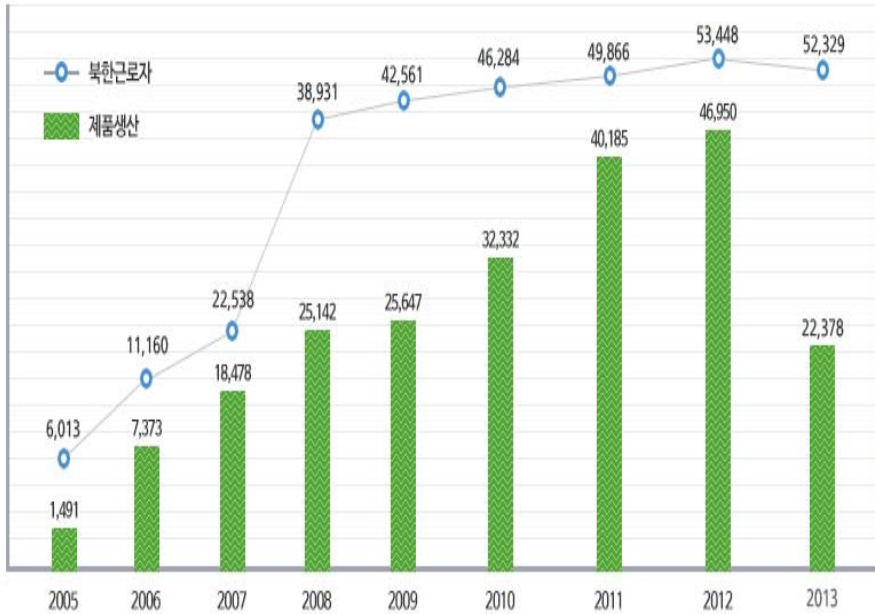
〈표 2〉 근로자 생산액 및 북한 근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북측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2,053
남측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776	786	757	767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50,642	54,234	53,086	53,054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

〈표 3〉 북한 근로자 투입수와 제품생산량



위 〈표 3〉 북한 근로자 투입수와 제품생산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성공단 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속적인 생산량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남북교역 건수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교역의 특징은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일반교역(위탁가공),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협력(금강산관광 및 기타 경공업협력 사업) 그리고 비상업적거래(정부 민간지원/사회문화협력/경수로사업)으로 3분화된 영역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민간주도 일반교역 위탁가공 교역거래가 많았으나 개성공단 사업이 안착되는 2008년 이후에는 정부주도사업과 비상업적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 개성공단 중단사태와 정부 지원

1)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따른 피해규모

2012.12.12,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당선 된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일 전인 2013.2.12.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북한은 한반도 위기 국면을 조성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위기는 중국에는 북한 근로자가 전원 철수하여 개성공단이 폐쇄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우리 정부도 2013년 5월 개성공단에 국민들을 전원 철수시키기에 이르렀다.

표면적으로는 남북한의 정치체제 대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 개성공단 내에서 기업 손실과 한반도 리스크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남았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를 조사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296개 기업은 피해금액을 총 1조 359억 원으로 신고하였다.¹¹⁾ 그 중 증빙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빙된 금액은 총7,890억 원으로 판정되었다. 실태조사에서는 한전,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10개사의 피해액은 제외하였으며,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미래 영업손실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정부지원 내용

정부는 2013.4.29. 제1차 정부합동대책 회의 및 실무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논의하고, 5월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630억 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천억 원,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1천억 원,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69억 원 등이다.

남북협력기금 및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2% 고정금리에 10어월 한도, 1년 대출기간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정책금융공사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형태이며,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한 시중은행 대출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에 가동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도 긴급은

11) 통일부, 전게서, pp. 71~72.

영자금을 대출하였다.

2013.6.7. 입주기업 실태조사 완료 이후 정부는 9월부터 긴급운전자금 대출을 추진하여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였다. 입주기업 123개사 중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1차 대출 시 10억 원 한도에 비해 최대 30억 원까지 같은 조건으로 한도를 대출을 확대하였다.

2단계 금융지원결과 2013.12.31.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총 1,11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지원되었다.

〈표 4〉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 현황

구 분		누 계
1차 대출	남북협력기 금특별대출	입주기업 76개사, 508억원
		영업소 29개사, 48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2건, 173억 5천만원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6개사, 44억원	
	신용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신보 21개사 55.3억원 기보 3개사 8.7억원	
	소계 837억 5천만원	
2차 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0개사 273억 7천만원
총 계		1,111억 2천만원

자료 : 통일부, 전개서, p. 73.

Ⅲ. 개성공단의 위험 관리

1. 정부에 의한 위험 관리

남북교역에 관한한 개성공단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남북경협

사업의 시작은 1988년 7.7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¹²⁾ 남북경제협력의 특징은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제투자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거래, 투자자 이익의 보호와 예측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¹³⁾ 이는 비록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남북경협사업에도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위탁가공을 중심으로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선행조건이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교역 파트너로서 상대방인 북한 정부에서 모든 정책과정에 보여주는 내용은 신뢰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협상에 임하는 북한 전략의 특징은 첫째, 항일유격대식으로 둘째, 작은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방법으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경제협력을 도출하고 셋째, 압박과 회유의 위협적 협상을 통하여 협상을 전개하는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병행하는 이른바 압박과 회유, 억지와 변명, 독촉과 책임전가로 비합리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¹⁴⁾

만일 우리기업이 해외에 직접진출하고 또 우리 정부와 해외정부가 투자협상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한 계약의 내용에는 투자의 목적, 안정성의 확보, 투자 시설 및 투자이익의 보호, 분쟁의 해결과 예방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⁵⁾

12) 국가기록원,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을 발표했다

(<http://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74&pageFlag= 참조>).

13) 김재성, “국제계약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보호요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8권, 2013, pp. 325~326.

14) 이성춘, 전개논문, pp. 362~363.

15)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남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협약의 조항으로 투자기업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e Government shall not exercise its legislative authority to amend or modify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and will not take or permit any of its

그러나 현재까지 북측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남북경협에 불확실성 문제는 상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와 북측이 협정으로 투자기업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서면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2013년 개성공단 폐쇄에서 본 바와 같이 북측이 협정을 위반할 때에는 사실상 대안을 찾기 어렵게 된다.

결국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이후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협정으로 진행되는 남북경협의 특성에서 정부에 의한 보호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반면에 정부입장에서는 만일 향후 개성공단 사업이 과거의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어 정상 조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의 경우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1,111억 원의 재정을 지출하였다. 만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정교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¹⁶⁾

2. 무역보험을 활용한 위험 관리

아무리 제도와 환경이 안정적으로 갖춰진 경우라 하더라도 투자를 실시하는 개별 업체의 모든 위험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 하지 않는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는 투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개성공단에 진출해야 하는 업체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위험을 극복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political subdivisions, agencies and instrumentalities to take any administrative or other action to prevent or hinder the contractor from enjoying the rights accorded to it hereunder”

16) 2006년에는 개성공단 1호 제품인 ‘개성냄비’ 생산업체 소노코쿠진웨어(대표 김석철)의 경영부실과 횡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문제와 공단입주기업의 피해는 구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http://economy.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industry/200606/e2006061217414447730.htm&ver=v002> 참조)

2013년 개성공단 폐쇄 사건 이후 손실을 입은 업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2013. 4. K-sure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수출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무역보험 긴급지원’ 시행하였다.

그러한 방법으로 업체의 손실을 정부지원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남북한 경직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사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도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이 정책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는 개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업인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전부 정부가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의심이 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K-sure 보험상품의 확대를 홍보하여 업체 스스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영논리나 정책적으로도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K-sure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과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1)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K-sure가 연대보증 하는 데 회원고객 재보증시에는 보증금액의 감액 없이 기간 연장된다.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K-sure의 연대보증으로 이들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신용장 개설의 원활화를 통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보증의 방법은 회전보증과 개별보증이 있다.¹⁷⁾ 회전보증은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원칙적으로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

17) https://www.ksure.or.kr/trade/insurance/ecg_pre_shipment02.jsp 참조.

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은행이 동일한 채무자에게 일으킨 대출에 대하여 공사가 기보증한 대출이 상환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보증은 보증서에 기재된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 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에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이다. 이때 보증기간은 수출계약서 수취에 대한 개별보증시 선적기한, 계약서의 유효기일 등에 따라서 조정된다.

이때 수입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여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수입자가 부담하는 보증료는 신용보증한도 × 보증서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보증요율로 결정한다.

〈표 5〉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자료 : K-sure 홈페이지.

2)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이 상품의 특징은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상품은 당해 무역거래에서 결제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및 재판매 거래의 4가지를 대상으로 하며,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고, 무상수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상품은 개별보험 또는 포괄보험으로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며, 보험가액은 수출대금이다.

부보율은 K-sure가 별도로 정한 국가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을 한도로 하고, 중계무역은 95%이내의 조건으로 정한다.

이 상품은 회원고객 수입자에게 대금미결제 수출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보상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거나, 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사고금액의 70~80% 상당의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게 된다.

〈표 6〉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절차



자료 : K-sure 홈페이지.

IV. 요약 및 결론

국제투자계약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간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기업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이윤의 보호이다. 다른 어떤 조건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더라도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모 든 것이 무효가 된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 사업은 기업의 이익적 측면을 뛰어 넘는 역사와 민족 앞에 고민으로 남는다. 그렇지만 아무리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따르는 한국의 투자기업이 부담을 안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비록 과거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이 꾸준히 지속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그 의도는 대부분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슬한 위반사례와 중단사례를 경험해 온 것도 사실이다.

향후 개성공단 또는 유사한 다른 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과거와 같

이 남북정부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해결방법은 사실상 없다. 비록 정부간 합의사항이 있었다더라도 2013년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거나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이런 사고의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개성공단내 한국 투자기업을 보호하는 안정장치로 우리정부가 리스크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으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개별기업이 K-sure에서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제도와 같은 무역보험 상품을 활용하여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비록 개성공단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큰 의미를 갖고 있더라도 일차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몫이 된다. 최일선 무역현장의 기업이 이러한 세부적 정책이나 보험상품을 일일이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홍보하여 개별기업의 리스크문제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긴장감도 해소하여 정책적으로 남북협력의 분위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고유환, “벼랑 끝 협상전술과 북한의 저의”, 월간북한, 제294호, 1996.
- 김재성, “국제계약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보호요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8권, 2013.
- 오석용, “CISG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제6권 제4호, 2010.
- 이상훈,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법제처, 2003.12.
- 양문수, “개성공단 사태 이후 남북관계 : 평가와 과제”, 통일전략포럼보고서, 경 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52권, 2013.
- 이성춘, “북한 협상모델 분석을 통한 경제협력 실천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2013.
- 이해정, “개성공단 국제화의 효과와 과제”, 통일경제, 2013. 1.
- 허정필, “개성공단 폐쇄 사태의 행위자-네트워크 : 국소적 연결망과 포괄적 연결망 추적”,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북한연구학회, 2013.
- 통일부, 통일백서, 2014.
- _____, “개성공단 길라잡이”, 2011.

ABSTRACT

Government Support and Risk Management to Kaesong Industrial Business

Kim, Jae Seong

This study is aimed to summarize a tense situation of Risk management for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 in 2013 and to investigate trade insurance of K-sure.

Now we have to find a new way to protect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s from uncertain environment and also need to prevent a recurrence of parallel cases in the domai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Korean peninsula.

There are two method to protect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s. First they rely on the Korea government for protection. Second they need to effect trade insurance of K-sure, such as Export Credit Guaranty or Short-term Export Insurance.

They shall create a wise predictable environment to protect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s themselves without resort to Korea government.

Of course there are many things left behind to consider I hope it will be helpful to those who prepar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especially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Key Words : Kaesong Industrial Business Enterprise, Risk Management of Kaesong Industrial Business, Trade Insurance, Export Credit Guaranty, Short-term Export Insurance.